

정치권·시민사회 “尹, 극단적 망상 표출·내란 자백”

우원식 “참담… 또다른 오관 없어야”
민주 “탄핵 염두… 극우 소요 선동”
혁신당 “헛소리 말고 수사 응하라”
시민단체 “탄핵 이유 더 분명해져”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미친 거냐”, “참담하다”, “광기” 등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참담하다”며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관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여야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현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



광주 시민들이 12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현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SNS를 통해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정말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바로 끌어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는 글을 남겼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헛소리 말고 수사를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탄핵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와 구속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란 범죄 수괴, 중범죄자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라며 “내란을 선동하기 위해서 지지층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극우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회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지아, 윤 탄핵 공개 찬성… 여당 내 7번째

한지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 소속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라며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적



었다. 이어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 “비상계엄, 헌법 틀 내 대통령 권한 행사”

사전 녹화한 영상 대국민담화 발표
한동훈 “직무집행 조속히 정지해야”
제명·출당 위한 당 윤리위 긴급소집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비상계엄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한 영상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범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사 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의 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스

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

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난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전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긴급 지시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의원직 상실… “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은 백선희 승계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대표는 이날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춘다”며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전에 의원직 승계를 빠르게 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꺾이게 되는 당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형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 선출

‘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다. 당 소속 의원 106

명 중 과반인 72명이 권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졌다. 양자 대결을 펼친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은 34표를 받았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 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

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물러날 것”이라며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 시작 무렵처럼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야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